

개념구조, 기능적 등가물 그리고 동아시아복지국가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의 활용*

이승윤**

〈 요약 〉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이다. 이 글에 대해 격려 및 조언을 주신 이호근 교수님, 최영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글을 심사해주시고 논평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도 감사드린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조교수(sophia.sy.lee@ewha.ac.kr)

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고,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주제어: 동아시아복지국가, 집합이론, 기능적 등가물, 필요충분개념구조,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 퍼지집합이론

1. 서장

‘대상(subject)’의 ‘본질(essence)’에 대한 논의는 로크(Locke) 이전의 형이상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많은 형이하학자들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고민되어왔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고민은 사회과학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철학적 논의로 이어지며 사회과학의 방법론도 발전해왔다. 다시 말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¹⁾ 등의 철인들이 제기하였던 ‘실재는 무엇이고,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뿌리로, 사회과학방법론은 ‘실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와 ‘인지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결합하는 것을 시도하며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비교연구방법론 역시 데이터의 양과 질의 향상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계량적 분석 및 양적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연구들이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Mahoney & Rueschemeyer, 2003). 필자는 계량적 분석의 선호에 대한 편중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제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비교연구는 서로 다른 시공에서의 동일 개념에 대한 비교로, 개념화 작업이 변수화 작업에 선행되어야 한다. 비교연구에서 이러한 개념화의 중요성은 비교가 갖는 통제적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비교사회

¹⁾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은 실재와 현상을 구분하여 이를 제1실체 및 제2실체로 구분하였고, 플라톤은 형상(形象)과 존재론적 차원의 이데아를 구분하였다.

정책에서의 비교연구는 다른 시공에서의 사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인데, 정책의 의의와 실효성 그리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실험적 상황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비교하는가?’라는 물음의 답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비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연구방법에서의 통제기능(controlling)에 있다고 할 수 있다(Satori, 2009). 그리고 비교연구에서 ‘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논의된 동일한 개념이 전제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변수화 작업 등의 방법론적 차원의 논의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변수화 작업에 앞서 비교하는 대상인 복지국가, 복지레짐 및 복지제도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았다.

서구에서는 2차 대전 이후 국가들이 경제성장 및 사회적 안정의 동시적 성취라는 황금기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반화 또는 국가별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각각에 대한 반론을 펼치며 각 이론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문적 고민도 촉진되었다. 특히 1990년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G. Esping-Andersen, 1990)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 시장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특정한 유형으로 결합되어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복지레짐에 대한 논의를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으로 전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각 국가들의 복지레짐을 이해하는데 있어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경험적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복지국가 비교연구방법에 있어서 유형화(typology)의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한 세 가지 복지레짐들 ‘외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Amsden, 1989; Johnson, 1982),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국가의 복지국가 유형화 가능성으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G. Esping-Andersen, 1997; I. Gough, 2001; Holliday, 2000; 김연명, 2002). 이러한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는 크게 두 줄기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서구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의된 복지국가의 개념 및 관련 변수를 근거로 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비교연구이고, 다른 하나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동아시아국가 간 또는 단일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동아시아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연구는 또한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성격논쟁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 전후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및 대중에게서도 새롭게 관심받기 시작하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Goodman & Peng, 1996; Goodman, White, & Kwon, 1998; 김진욱, 2005; 김영범, 2002; 김연명, 2004; 김연명, 2011; 김원섭, 2008; 김희자, 1996; 백승호 & 안상훈, 2007; 박용수, 2007; 남찬섭, 2005; 남찬섭, 2008; 나병균, 2010; 노병일, 2005; 이광찬, 2002; 정무권, 2004; 양재진, 2005; 심창학, 2004; 심상용, 2010).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해석,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지만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제4의 유형으로 유형화 하거나 새롭게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연명(2004) 또한, 에스핑-앤더슨이 사용한 복지체제 유형론을 동아시아 국가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논하면서, 에스핑-앤더슨이 사용한 각종 변수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다시 말해, 서구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이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 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비교연구에 있어 개념구조에 대한 논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비교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동아시아복지국가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비교사회정책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비교연구에서 개념의 중요성,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 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attributes)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기능적 등가물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개념에 대한 논의

1) 비교연구에서의 개념

비교연구에서 개념의 함의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비교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Dogan과 Pelassy는 비교연구방법론에 대한 그들의 논고 - How to Compare Nations (1990)-에서 정치학 연구에 있어 비교(comparison)란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오래된 연구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철학자들은 타인의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²⁾’라는 서술로 서문을 시작한다. 이러한 비교의 목적에 대해서 Przeworski(1987)는 이해(understanding), Ragin은 설명 및 해석(explaining and interpreting)(1987: 6), Mayer(1989)는 재정의(redefine)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Satori는 무엇보다도 비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통제(controlling)라고 강조하고 있다(2009). 물론, 통제의 방법에는 실험적 통제(experimental control) 또는 통계적 통제(statistical control) 등도 있어 비교를 통한 통제(comparative control)만 통제적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험적 통제는 사회과학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통계적 통제는 많은 사례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특히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사례수보다 변수의 수가 많게 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Lijphart(1971)은 이런 경우, 비교연구방법을 통한 통제(comparative method of control)에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방법들 중 구체적으로는 Mill의 일치법(method of agreement) 및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 등이 있다. 전자는 비교대상 국가들에서 발생한 동일한 현상/사건에 대해, 다른 변수는 모두 다른데 유일하게 일치하는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반면, 차이법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현상 및 사건에 대해, 다른 변수는 모두 일치하는데 유일하게 서로 다른 변수에 관심을 갖고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표 1).

2) “An age-old idea of philosophers is that knowledge of the self is gained through knowledge of others” (1990:5)

[표 1] Mill의 비교연구방법론: 일치법 및 차이법

비교연구방법	일치법(Method of agreement)		차이법 (Method of difference)	
	국가1	국가2	국가1	국가2
연구대상	a	b	a	a
통제변수	c	d	b	b
설명변수	e	e	c	d
결과	o	o	o	x

비교연구에서 비교의 통제적 기능을 고려하고 일치법 혹은 차이법을 적용할 때, 우리는 변수들을 정하고 분류하는데 있어 어디까지를 ‘일치’ 혹은 ‘차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권력자원이론의 검증을 위해 독일과 영미국가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때,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German Christian Democratic Union)과 영국의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을 ‘동일한’ 변수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미국의 민주당(Democratic party)을 동일한 정당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당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때 같은 개념을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각 국가들의 특정 정당의 변수화 작업에 선행되어야 할 논의는 좌파정당 및 우파정당의 개념적 ‘속성(attributes)’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동일한 개념(예를 들어, 좌파정당 및 우파정당)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수화(예를 들어, 좌파정당 의석수 및 우파정당 의석수)에 앞서 이론이 바탕이 된 철저한 개념화 과정(좌파정당 및 우파정당의 개념적 속성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³⁾.

또한 복지국가 비교연구에서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함의를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Esping-Andersen, 1990)은 국가의 정책과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및 계층화(stratification)와의 관계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복지국가를 개념화하였다. 즉, 탈상품화와 소득의 재분배의 속성으로 복지국가를 정의한 후, 유형화 방법을 사용한 비교연구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화에 Orloff(1996),

³⁾ 비교연구에서 개념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Satori(1984)는 ‘the better the concepts, the better the variable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m’라고 주장하였다.

Lewis(1992), Sainsbary(2000)를 비롯한 많은 여성학자들은 탈상품화 및 계층화를 바탕으로 한 남성주의적 시각의 복지국가 개념을 비판하며, 여성의 ‘상품화될 권리’(the right to be commodified)를 복지국가의 속성으로 추가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개념 자체에 대한 재논의는 종속변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복지국가 연구(예, 복지국가 발전요인 분석)를 독립변수 차원의 논의(예,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에 대한 연구) 다시 이동시켰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재정의된 새로운 개념의 복지국가는 변수에 대한 재논의를 필연적으로 재개시켰다(Goertz, 2006).

비슷하게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서구국가들 중심의 복지체제 유형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는 이미 지적되어왔다. 김연명(2004)은 기존의 복지체제 유형 분류에서 사용한 ‘속성’과 지표들을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동아시아 각국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복지체제 분류의 속성과 지표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재개념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서구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이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속성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또한 변수 및 지표에 대한 재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지표를 확대 및 재구성하기에 앞서 필요한 작업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에 대한 재논의인 것이다.

2)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와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

3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대한 연구들이 복지국가의 어떠한 속성들을 토대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는지 재검토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개념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Satori(1984), Ragin(1984), Collier(2009), Goertz(2006) 등이 시도한 개념에 대한 논의는 비교연구방법론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는데 개념에 대한 이들 학자들의 여러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비교사회정책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개념구조들을 집합이론을 활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개념은 존재론적 차원의 ‘실재(essential)’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떠한 실체의 ‘실재(essential)’과 ‘현상(superficial phenomenon)’을 구분하였는데, 실재의 변화는 현상의 변화를 야기하지만 현상의 변화는 실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수급방식을 서비스 위주에서 현금급여 위주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영미식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attributes) 중 하나인, 예를 들어, 시민권 바탕의 복지수급자격이 자산조사에 따른 조건으로 변한다면 이것은 개념적 속성의 변화인 것이다. 이렇듯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속성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개념구조로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structure)와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Family resemblance structure)를 소개하고자한다(Goertz, 2006)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concept structure)는 어떠한 개념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에 주목한다. 어떠한 실체(object)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재(essence)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실재를 구성하는 것은 속성들(attribute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이 연구대상인 개념의 필요조건이 된다. 개념의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의 교집합은 충분조건이 될 수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데 즉, 속성들이 조합을 이루어 어떠한 개념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집합이론에서 수학적으로는 iff-if and only if로 표기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어떠한 속성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Wilensky(1975)는 “국가가 자선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권리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소득수준, 영양, 건강, 주거 그리고 교육 정도를 보장하는 것”(1975:1)이라고 복지국가의 개념을 규정하였다⁵⁾. 그의 복지국가의 개념을 해부해보면, ‘시민권에 근거한’ ‘기본적 생활수준’을 ‘국가가 보장’으로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을 구별해볼 수 있겠다⁶⁾. 그의 복지국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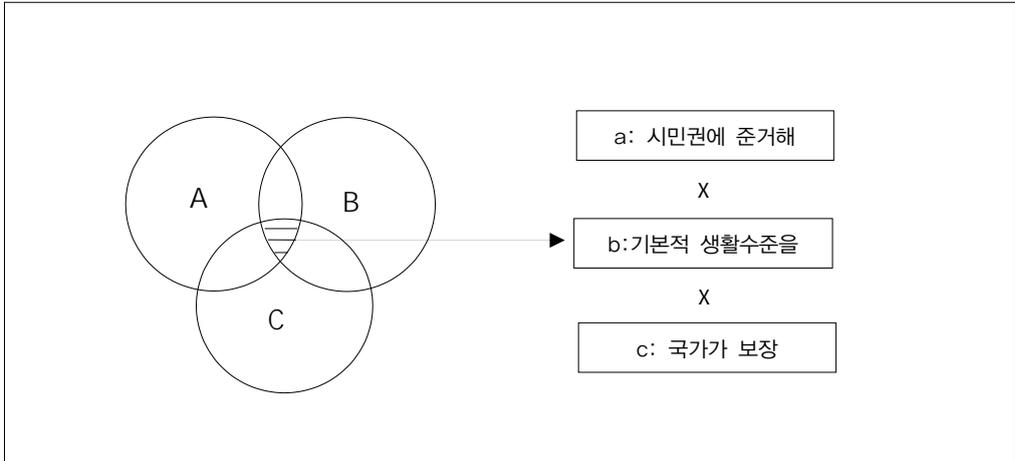
4) Goertz (2006)는 사회과학에서의 개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의 개념구조 및 개념화 방법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그의 논의에서 중 두 가지의 개념구조를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새롭게 설명하고 복지국가연구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5) “The essence of the welfare state is government-protected minimum standards of income, nutrition, health, housing, and education, assured to every citizen as a political right, not as charity.”(Wilensky, 1975:1)

6)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개념 규명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비교사회정책에서의 개념화 작업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임의로 Wilensky가 정의한 복지국가에서 세 가지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에서는 위 세 가지의 속성들이 필요조건으로 존재하고, 그 ‘결합’이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그림 1).

[그림 1]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로 해석한 Wilensky의 복지국가 개념



위의 개념구조로 보면 복지국가는 a, b, c의 세 가지 속성의 결합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갖는다. 개념의 변수화 과정은 모든 속성들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가진 경험적 지표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민권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 정책’은 세 가지의 속성을 필요조건으로 갖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의 속성들을 모두 필요조건으로 갖는 정책들은 복지국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 및 지표로 채택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의 내연성과 외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에서 개념의 내연성을 늘인다는 것은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의 수를 늘인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속성들의 결합은 외연성을 줄일 수밖에 없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에서 내연성과 외연성은 역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family resemblance concept structure)는 선차적으로 충분조건들을 고려한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는 어떤 실체에 반드시 n개의 모든 속성들이 존재할 때만(if and only if n attributes are present) 그 개념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는 충분조건에 되는 n개의 속성들 중에 m개까지만 존재

해도(if m of n attributes are present) 그 개념이 수립된다고 규정한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집합의 경계 또한 유연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n개의 속성 중에서 몇 개 이상의 속성들이 존재할 때 그 개념이 수립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연구대상인 개념의 상위개념을 먼저 고민한 후, 상위 개념을 축소해나가면서 해당 개념의 개념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 개념으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논한 연구로는 Hacker(2004), Bonoli(2005), Holzmann, R., & Jørgensen, S.(1999), Holzmann, R., & Jørgensen, S.(2000) 등이 있는데 ‘위험관리’라는 개념은 ‘복지국가’의 상위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위험관리’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개념적 속성들을 먼저 나열해볼 수 있겠다. 각각의 속성은 필요조건이 아닌 위험관리의 충분조건인데, 이러한 개념적 속성 중 몇 개까지가 존재해야 비로소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수립될 수 있는지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 Hicks(1999)의 복지국가 개념을 살펴볼 수 있겠다. Hicks(1999)는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네 가지; a) 실업보험, b) 의료보험, c)고령연금 그리고 d)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 중 세 가지가 존재하면 복지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집합이론으로 해석한다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에서와 같이 속성들의 교집합이 아닌, 속성들의 합집합으로 개념을 정한다. 그러므로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는 내연성의 증가와 함께 외연성도 증가한다.

위 두 가지의 개념구조는 집합이론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와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집합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한 후 각 개념구조에 불리언방법과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3) 집합이론의 활용: 불리언대수와 퍼지집합이론

고전적인 집합이론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개념구조를 설명하자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에서는 집합이론의 ‘그리고(logical AND)’를 통해 각 속성들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개념의 범위가 될 수 있다. 위의 [그림 1]에서 각 필요조건들이 모두 개념적 속성으로 존재할 경우, 다시 말해 필요조건들의 교집합이 필요충분조건이 될 때 개념이 수립될

수 있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는 어떤 실체에 반드시 n개의 모든 속성들이 존재할 때만 그 개념이 수립될 수 있다. 반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는 집합이론의 ‘또는(logical OR)’를 이용하여 n개의 속성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상위개념의 충분조건이 되는 속성들 중에 몇 개 이상의 속성까지 존재해야 개념이 정의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먼저 가능한 속성들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상위개념이 될 수 있는 개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관리라는 속성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개념적 속성을 먼저 나열할 수 있다. 소득보장, 아동보호, 노인보호, 의료보호 등의 가능한 속성들을 모두 나열하고(n개) 그중 특정 개수(m개) 이상의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복지국가의 개념이 수립된다고 결정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속성들이 각각 충분조건이며 ‘또는(OR)’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속성의 존재여부 보다는 속성의 개수가 중요하다. 상위개념에서부터 개념을 축소하면서, 세 개 이상의 속성이 존재할 때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집합이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

- i) $R(\text{위험관리}) = 'A(\text{의료보호})' + 'B(\text{아동보호})' + 'C(\text{고령보호})' + 'D(\text{소득보장})'$
- ii) $W(\text{복지국가}) = ABCD + ABC + ABD + ACD + BCD$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는 위의 i)의 공식에서와 같이 유사한 개념적 속성들을 먼저 나열한 후, ii)와 같이 3개 이상의 속성이 조합으로 존재하는 경우 복지국가가 개념화된다. 이때 세 개 이상의 속성들이 조합을 이루어 복지국가의 충분조건이 된다. 위의 경우, 다섯 개의 조합이 복지국가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는 확장된 개념의 속성들 n개 중 m개의 속성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개념구조이기 때문에 귀납적인 측면이 강하다. 반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는 연역적인 개념화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작업은 불리언 대수(Boolean algebra) 및 퍼지집합이론(fuzzy-set theory)를 통해 좀 더 정교화 될 수 있다. 고전적인 집합이론에서 개념의 각 속성들은 집합(Crisp set)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이분법적 구조 이해된다. 즉, 개념적 속성이 집합에 존재 또는 존재하지 않는가의 여부가 0(속하지 않음 또는 없음) 또는 1(속함 또는

있음)인 결정적방법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퍼지집합이론은 개념적 속성이 대상 집합에 ‘불확실하게’ 또는 ‘애매하게’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퍼지이론(fuzzy theory)은 1965년에 Loft Zadeh에 의해 제창되었는데, 1(참)과 0(거짓)의 이분법적 고전적집합이론과 달리 어떠한 요소가 집합에 속하는 정량적 비율에 따라 속함과 속하지 않음이 정해지는 퍼지집합이론이 개발되었다.

각 개념구조에서도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하여 개념적 속성이 집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데, 퍼지점수(Fuzzy-set membership score)를 통해 어떠한 개념적 속성 또는 속성들의 조합이 이념형(ideal type)에 얼마나 속하거나 속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소속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이러한 퍼지점수는 0에서 1사이의 점수로 매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그림 1]의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개념적 속성인 ‘시민권’, ‘기본적 생활수준’ 및 ‘국가가 보장’의 개념적 속성에 각각 퍼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기본적 생활수준’이 이분법적 구조에서는 1과 0으로 표현된다면, 퍼지점수를 통해 이 개념적 속성의 정도(degree)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1과 0 사이의 퍼지점수는 연속적인 점수 또는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해 설정된 분기점에 따라 여러 개의 범위 내의 점수로 매겨질 수 있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속성들은 퍼지점수가 부여 될 수 있다⁷⁾.

각 개념적 속성들에 퍼지점수가 부여되면 불리언 대수에 의해 정의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하나의 퍼지점수가 도출 될 수 있다. 먼저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의 경우, 이분법적 집합이론을 사용할 때 필요조건이 되는 개념적 속성이 모두 존재해야(또는 속해야) 한다. 이때 퍼지집합이론을 활용한다면 경우 각 속성들의 퍼지점수는 불리안대수의 ‘그리고(logical AND)’에 의해 최소점수로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속성A의 퍼지점수가 0.75, 속성B는 0.5, 속성C는 0.35인 경우, 세 가지 속성을 모두 필요조건으로 갖는 연구대상의 ‘개념’은 0.35라는 퍼지점수를 갖게 된다. 반면에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는 각 개념적 속성들이 필요조건이라기보다는, 개념적 속성들의 ‘조합’이 연구대상이 되는 개념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안대수의 ‘또는(logical OR)’를 사용하여 최대점수가 도출된다. 위에서 제시된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에서의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예를 다시 사용하여, 속성A(의료보호)의 퍼지점수가 0.75, 속성B(아동보호)가

⁷⁾ 퍼지점수도출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Ragin(2008) 및 최영준(2009)의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0.5, 속성C(고령보호)가 0.4 그리고 속성D(소득보장)는 0.9이라고 간주한다면. 속성들의 조합인 ABCD의 점수는 0.9, ABC는 0.75, ABD는 0.9, BCD는 0.9이 된다. 즉 복지국가의 개념이 될 수 있는 조합들은 다섯 개까지 형성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각각의 퍼지점수가 계산될 수 있다.

3. 동아시아복지국가론과 기능적 등가물

지금까지 비교연구에서 개념이 갖는 함의에 대해 논하고, 비교연구에서의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기능적 등가물의 유용성에 대해 논하고 기존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에서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기능적 등가물

위의 개념구조 논의에서 이어 먼저 본 절에서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의 개념과 그 유용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기능적 등가물 개념은 변수구성 단계에서 한 지표 대신에 대체 가능한 다른 지표를 사용할 때 주로 채용되는 개념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의 경험적 증거가 부재할 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경험적 증거를 대신하여 사용하기 위해 흔히 채용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Dogan & Pelassy, 1990; 안상훈, 2003).

구체적으로 기능적 등가물인 두 제도를 선택해야하는 경우, 세 가지의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두 제도 및 정책의 수립목적이 동일할 때 두 제도는 기능적 등가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교주의 국가에서 조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현금 지원과 기능적으로 등가라고 논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보육’에 대해 국가 정책을 이해할 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경우일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두 제도의 목적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결과(outcome)가 동일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초기의 정책수립과 정책입안자가 일차적으로 계획한 정책의 목표는 다를 수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책의 산출물 및 효과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의 초기목적 또는 실제적인 결과보다도 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동일할 때 두 제도들이 기능적 등가물로 판단될 수 있다. 두 제도들을 선택하였을 때, 대상 제도들이 세 가지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제도들의 기능적 등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 경우를 서로 구분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와 타 국가의 고용보험제도는 동일하게 피고용자의 고용안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도 본연의 목적 및 결과가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교대상 에 대한 연구자의 깊이 있는 질적 지식에 근거하여 등가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즉, 종신고용제의 초기도입 목적 및 다른 제도와의 상호보완성 등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제도의 결과 역시 이중노동시장의 발달 등과 같은 부작용 등의 초래 여부를 고려하여 제도의 등가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다.

일반적 비교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기능적 등가물은 개념화 단계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간의 비교연구에서는 어떠한 대상의 동일성 및 차이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기능적 등가물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적 차원에서의 기능적 등가물은 개념을 구성하는 특정 '속성'을 다른 '속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속성A를 속성B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속성B는 속성A의 기능적 등가물이다. 기능적 등가물의 개념은 개념화 및 변수화 작업에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경우, 개념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속성을 채용하기에 앞서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의 개념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개념구조에서도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기능적 등가물은 집합이론에서 '또는(OR)'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즉, 속성A '또는(OR)' 속성B를 해당 개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의 경우 유사한 속성들을 나열 후 충분한 속성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성들

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 등가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의 경우는 개념화 단계에서보다는 변수화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개념의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을 선택하여 필요충분조건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는 그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수들은 서로 기능적 등가물로 간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 개념의 필요충분조건적 속성을 a)시민권에 근거해, 사회구성원들의 b)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유지를 c)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하면 이 세 가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정책들은 모두 기능적으로 등가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많은 수의 속성들로 이루어진 필요충분조건인 경우 그 개념의 내연성이 높은 반면 외연성은 줄어들어 선택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적 등가물을 활용하여 부재하는 경험적 자료를 기능적 등가물인 다른 자료로 대체 하여 줄어드는 외연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동아시아 각 개별 국가 연구(특히 일본복지국가 연구)에서 기능적 등가물에 대한 논의는 종종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이 제기한 지표에 부합하는 경험적 증거의 부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 논의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잘못 활용한 경우는, 기존에 탈상품화, 계층화 등의 속성으로 개념화된 복지국가유형들에 새로운 속성을 동아시아국가의 개념화 단계에서만 추가하여 제4의 유형을 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2개라면, 동아시아국가의 경우 그 속성이 3개인 경우가 되어 동일한 개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차원을 고려해 에스핑-앤더슨이 사용한 개념적 속성을 기능적 등가물인 다른 속성으로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여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오류가 있다. 김연명(2004) 역시 에스핑-앤더슨이 제기한 유형들에 더하여 다른 속성들을 기준으로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제4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방법론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생산주의적 복지체제, 발전주의적 복지국가 등으로 분류한 작업의 한계를 논하였다. 사실 1990년 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동아시아복지국가론은 국제복지국가비교연구의 유형론 및 복지국가 발전론을 재고하게 하고, 동아시아 개별 복지국가들에 대

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러한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흐름은 한국복지국가 및 복지정책에 대한 다학문적 학자들 간의 건설적인 토론으로 발전되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큰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다(김연명, 2002; 정무권, 2009). 대부분의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들은 경험적 자료를 재분류 및 재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복지국가 성격을 재조명하거나 새롭게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요인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한국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반면 인식론적 차원(epistemology)의 경험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서구의 복지국가연구 발전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유럽의 경우, Titmuss(1976) 등에 의한 복지국가의 속성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있었으나, 복지국가 비교연구는 복지국가 지출의 증가 등 복지국가 발전요인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Collier & Messick, 1975; Cutright, 1965; I. Gough, 1979; OECD, 1981; Offe & Keane, 1984; Wilensky, 1975). 이후 이러한 연구 동향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론(1990)의 등장과 함께 개념적 이상형(ideal type)을 구성하는 속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에스핑-앤더슨이 제안한 개념적 속성들은 서로 다른 시공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일치성’이 있는 속성이면서도, 국가들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차이성’을 고려한 속성들로, 비교연구에서의 개념적 속성이 갖는 함의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 후 여성주의적 속성(Lewis, 1992; Orloff, 1996)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있는 복지적 속성(Hall & Soskice, 2001)이 새롭게 복지국가 논의에 포함되면서 복지국가 논의도 개념적 차원에서 다시 이루어졌다.

2) 지금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론 연구

그렇다면, 에스핑-앤더슨(1990, 1999)의 유형화론에 근거하여 서구 복지국가들과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동일한 개념의 ‘복지국가’를 비교하는 것인가? 동아시아국가 간의 유사성에 관심을 가진 대표적 연구로는 유교주의적 복지국가론(Jones, 1993;

Rieger & Leibfried, 2003, White & Goodman, 1998)이 있다. Jones(1993)는 동아시아 다섯 개국을 유교주의적 복지국가로 함께 분류하여 서구복지국가와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특히 사회정의 실현, 시민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의 정치적 노력이 없고, 국가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가정으로 여기는 집합주의적 문화에서 서구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제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개념구조를 살펴보면,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하나의 유사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서구의 사민주의 유형, 보수주의 유형, 영미주의 유형과의 차이를 경험적 차원에서 논한 것인데 예를 들어, 동아시아복지국가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의 부재를 ‘노동자 없는 보수적 조합주의’로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노동조합 영향력의 부재를 경험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이러한 차이성을 개념적 속성의 차이로 간주하여 ‘유교주의’라는 속성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교주의와 등가인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개념적 속성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같은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제4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서의 경험적 차원의 예외성을 ‘묘사하기’ 위해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에만 유교주의라는 ‘문화적 속성’을 추가한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유교주의 복지국가와 서구의 복지국가 유형들은 서로 다른 개념적 속성들을 근거로 비교되어 방법론적 오류가 있다.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생산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한 Holliday(2005) 역시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예외성을 논하면서,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의 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성장지향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역시 동아시아복지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외성을 묘사하기 위해 성장과 관련한 복지정책의 성격을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국가(Goodman & Peng, 1996; Kwon, H. J, 2005; Chung, M. K, 2006)는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하나의 정형화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개별국가들 간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위의 유교주의 복지국가론과 생산주의 복지국가론과 차별된다.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개념을 빌어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은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의 일차적 목표인 경제성장에 초점

을 맞췄다는 점에서 생산주의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교육의 강조 및 엘리트 집단의 역할 등 다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주의 복지국가론에서는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서구복지국가 유형론의 예외적 유형의 하나로 간주할 지 혹은 동아시아개별복지국가들 간의 차이성을 강조할 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일본, 대만 및 한국에서의 사회경제학적 공통점을 논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하는 듯하나, 일본, 대만, 한국의 복지국가 간의 공통점에 기초하여 각 국가들의 차이점을 구별한, Mill의 차이법 비교연구(method of difference)를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유형화방법과는 다른 비교연구방법으로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제4의 유형으로 제안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국가들을 ‘복지국가’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복지과 관련된 정치경제 및 사회의 특징 중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공통점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I. Gough & Thomas, 2000; Hort & Kuhnle, 2000; Tang, 2000)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동아시아국가들을 복지국가라고 분류하기에는 그 복지체제가 미성숙하지만, 복지와 관련해 서구 복지국가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동아시아국가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 또한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경험적 차원에서 동아시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정치경제 현상에 대해 묘사한 것이다. 그러한 경험적 차원에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서구와 구별되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법론적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Takegawa(2005)가 지적하였듯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서구의 복지국가들을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분류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복지 오리엔탈리즘(Welfare orientalism)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구국가들과 동아시아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 없이 경험적 차원에서 발견되는 특징들만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속성을 기준으로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 따라 혼합형(hybrid)으로 분류하는 연구들(G. Esping-Andersen, 1997; G. Esping-Andersen &

Development,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1996)이 있는데, 동아시아복지 국가들을 보수주의 복지체제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이 경우, 동일한 개념적 속성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방법론적 오류는 적을 수 있으나, 주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경험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 보다는 혼합형의 복지체제를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무른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서구복지체제의 개념적 속성에 근거해, 서구에는 존재하는 정책 및 제도가 동아시아국가에는 부재하여도 기능적 등가물인 제도나 정책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를 결부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연구들이다(Estevez-Abe, 2008; Lee, 2011; Seeleib-Kaiser, 2002). 특히 Estevez-Abe(2008)와 Lee(2011)의 연구들은 자본주의 다양성론(Varities of Capitalism)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국가의 복지제도가 부재한 경우, 다른 제도들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들의 상호보완성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및 임금보장 등의 기능적 등가물로 Lee(2011)는 산업화 시기 기업에서 이루어진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제도, 보너스 및 각종 가족 수당 등을 예로 들었다. Estevez-Abe(2008)는 일본의 복지체제를 연구하였는데,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유형론을 사회민주주의 편향적 유형론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복지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같은 기능을 한 대규모의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규제 등을 기능적 등가물의 예로 들었고, 또한 복지체제에 있어 금융시장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시장의 각종 제도가 갖는 보완적 성격 논의에서 더 나아가 복지체제 논의를 일본식 자본주의의 성격 대한 논의로 확장시킨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들을 비교연구 할 때, 기능적 등가물 개념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복지국가비교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에 근거해 시장의 복지적 기능을 논한 위의 두 논문과 달리, Kim(2010), Kwon, H.-J. & Yi, I.(2009)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들의 상호 대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체적 사회정책(surrogate social policy)의 개념을 사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를 설명하였다. 특히 Kim(2010)가 제안하는 위 개념은 기능적 등가물과 다를 것이 없는데, 특별히 ‘정책’의 상호 대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채용한 개념으로 보인다. Kim(2010)는 대부분의 복지국가 연구에서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의 낙후성을 전제하고

그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그는 영국의 의료체계를 모방하여 구축된 홍콩의 무상의료서비스, 한국과 대만의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도 등을 예로 들며 Hort and Kuhnle(2000)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국가들의 발전시기를 고려하여 서구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낙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그의 연구는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사용하기에 앞서 복지국가에 개념적 속성에 대해 논하여, 기능적 등가물 개념의 채용이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Kim(2010)는 그의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근거하여 ‘교육’을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으로 추가하여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의 교육비 정부지출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정부 교육비 지출이 복지지출의 대체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 시민권 혹은 위험관리가 아닌, ‘인간개발’과 같은 개념적 속성에 근거하여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정책들은 서로 기능적 등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 복지국가논의에서 Esteve-abe(2008), Seelieb-Kaizer(2003) 등은 일본의 농업보호정책이 갖는 복지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적 등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시 말해, 농업종사자 및 종사자가족의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업보호주의 정책은 개인의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등가물을 제안하기에 앞서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능적 등가물의 명목적 기능뿐만 아니라 결과적 측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전체에서 농업인의 인구 비율, 가족의 의존 정도, 타 정책과의 상호보완정도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능적 등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산업화시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기능적 측면을 예를 들 수 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의 기능적 등가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들의 소득상승을 통한 복지의 증가라는 논리인데, 이것은 그 사회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 것이다. 충분한 낙수효과가 없는 국가에서는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을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야기시킬 수 있어 위험분산(risk distribution)이라는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3) 복지국가연구에서 집합이론과 기능적 등가물 개념의 활용

비교연구에서 개념적 차원에서와 실증적 변수 차원에서 국가들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각각의 함의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유형화를 통한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수행할 때, 복지국가 간의 차이점이 변수단계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인지 복지국가 개념 자체의 속성들이 일치하지 않아 발견되는 차이점인지 구별해야 방법론적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비교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의 개념구조들과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활용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념을 다시 재개념화할 수 있다.

동아시아복지국가도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 또는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이용해 개념화할 수 있다.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인 경우, 일차적으로 동아시아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 되는 속성들을 이론에 근거해 선택한다. 이때 이론적 바탕 위에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맥락 등과 같은 질적 지식도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구자의 가치와 철학적 판단에 따라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이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으로 시민권 개념을 필요조건적 속성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회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위협관리를 개념적 속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시민권을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으로 선택하는 경우, 시장 등의 비공식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제공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될 수 있다. 반면, 국가의 위협관리를 개념적 속성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변수 및 지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 앞서 논한 것과 같이 이 경우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를 이용해 복지국가를 개념화하는 경우 여러 상위개념을 고려한 후 복지국가라는 개념으로 축소해나갈 수 있다. 동아시아복지국가들의 경우 서구 국가들과 같이 시민권에 기반하며 복지국가의 속성을 열거하는 것 보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가 구성원의 위협관리를 위해 실행하는 모든 정책적 속성들을 열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시민권에 근거해 보편주의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오히려 소득상승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즉각적인 위협관

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Kim(2010)의 연구와 같이 시민권 혹은 위험관리가 아닌 ‘인간개발’과 같은 개념적 속성을 포함시킨 복지국가의 개념인 경우, 교육정책 등과 같이 ‘인간개발’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서로 기능적 등가물이 될 수 있다.

개념구조와 경험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의 경우 내연성과 외연성은 상쇄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 내연성이 증가할수록 외연성도 증가한다. 반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의 경우 내연성이 증가하는 대신 외연성이 줄어들어 변수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변수차원에서 기능적 등가물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내연성의 복지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할 때, 특정 정책이 대상 국가(들)에는 부재하여도 기능적으로 등가물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대체시켜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분법적 방법으로 개념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개념의 범위에 융통성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구조와 복지국가연구 방법론에 대해 정리하면,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 개념적 속성을 논하고 그것이 다른 시공에서 갖는 일치성을 전제로 국가들 간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 유형화론에 유용한 반면,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는 유형화론 보다는 각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외연성이 높아,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재개념화 작업에 유용할 수 있다.

[표 2] 비교사회정책에서 개념구조, 집합이론 및 기능적 등가물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
개념적 속성	필요조건	충분조건
고전적 집합이론	교집합 (Logical AND)	합집합(Logical OR)
퍼지점수	최소점수 부여	최대점수 부여
내연성과 외연성의 관계	상쇄관계	비례관계
기능적 등가물	변수화 단계에서 유용	개념화 단계에서 유용

복지국가연구에서 개념적 속성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정체적 개념이 아닌 동태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첫 번

째 의미로는 ‘복지국가’의 동일한 개념적 속성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이동하며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다음은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의 확장 가능성에 있다. 예를 들어, 교육문제, 주택문제, 여성차별 및 인종차별적 문제는 복지국가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복지정책차원의 논의로도 발전 될 수 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정치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념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줄 수 있을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으며 국제복지국가 비교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교연구에서 개념의 중요성,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동아시아복지국가의 개념적 속성들(attributes)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에 대해 논하였다.

비교사회정책에서 비교연구방법론의 개발 및 ‘확실한’ 적용의 중요성은 최영준(2009), Mahoney & Rueschemeyer(2003), Mahoney(2009), Ragin(2008)등에 의해 이미 강조되어왔다. 특히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전적 집합이론 및 퍼지이론 등을 활용한 비교연구방법론들이 논의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질적비교연구(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퍼지셋질적비교연구(Fuzzy -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퍼지셋이상형분석(Fuzzy - set ideal type approach)등이 개발되어 비교사회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Lee, 2011b). 위와 같은 연구방법론들은 사례중심적 연구와 변수중심적 연구 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비교연구방법론들이다. 본 논문은 복지국가 유형화 및 동아시아복지국가론과 같은 비교연구에서, 집합이론 및 퍼지이론이 비교연구의 개념화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소

개하였다. 또한 개념에 대한 논의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연구에서의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경험적 연구 단계)와 존재론적 차원의 논의(개념적 논의 단계)를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비교연구에서 ‘비교’가 갖는 통계적 목적과 관련하여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두 가지의 개념구조인 필요충분조건 개념구조와 집합적 유사성 개념구조의 장단점을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소개하였다. 이어 각 개념구조에서 기능적 등가물의 유용성 및 활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아시아복지국가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및 비교사회정책에서의 ‘개념’ 및 ‘개념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교연구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서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터의 양과 질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발전을 이뤄왔으나 근래까지의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는 계량적 분석 및 양적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연구들이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다. 복지국가연구, 특히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변수차원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념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발전할 때 비교사회정책연구의 현실적 중요성이 증진될 수 있다. 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인식론적 차원의 정교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동아시아복지국가론뿐만 아니라 비교사회정책학 역시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김교성 & 김성욱. (2010).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사회복지학, 62(1), 5-30.
- 김연명. (2002). (한국 복지국가)성격논쟁. 서울: 인간과복지.
- 김연명. (2004).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20(1), 133-154.
- 김연명. (2011). [총론]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예외성? 亞細亞研究, 54(1), 7-21.
- 김영범. (2002).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도의 미성숙성과 그에 따른 한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11(1), 85-108.
- 김원섭. (2008). 참여정부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사회, 9(2), 29-53.
- 김진욱. (2005). 한국 복지국가 공급체계의 혼합(Mix) 구성.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0), 35-56.
- 김희자. (1996). 한국 복지제도의 성격 규정에 대한 시론. 사회복지정책, 3(1), 129-144.
- 나병균. (2010). 서구적 동아시아복지국가 담론의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연구. 사회복지연구, 41(3), 5-27.
- 남찬섭. (2005). 한국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월간 복지동향, 75(1), 30-40.
- 남찬섭. (2008). 한국 복지국가의 위상과 전망. 노동사회, 136(1), 102-117.
- 노병일. (2005). 동아시아 복지 모델의 특징과 방향. 社會科學論文集, 23(2), 293-310.
- 박용수. (2007).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國際政治論叢, 47(2), 97-122.
- 백승호 & 안상훈. (2007).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공공사회복지 지출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5(-), 337-362.
- 심상용. (2010).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 형성 연구: 억압적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비공식 보장의 복지체제. 사회복지정책, 37(4), 1-25.
- 심창학. (2004). 동아시아 복지 모델의 유형화 가능성 탐색. 사회복지정책, 18(-), 55-81.
- 안상훈. (2003). 친복지동맹의 복지지위균열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21), 79-104.
- 양재진. (2005). 한국의 대기업중심 기업별 노동운동과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9(3), 395-412.
- 이광찬. (2002).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4), 332-347.
- 정무권. (2004). 제3회의: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 춘계학술대회, 2004(-), 692-715.
- 정무권. (2009).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2. 서울: 인간과복지.

- 정의룡 & 양재진. (2012).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6(1), 309-424.
-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샤기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307-338.
- Amsden, A.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noli, G. (2005).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Policy & Politics*, 33(3), 431-449.
- Chung, M. K. (2006). The Korean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Shakai Seisaku Gakkai Shi. Journal of Social Policy and Labor Studies, Japan*, 16, 149-171
- Collier, D., & Messick, R. (1975). Prerequisites versus diffus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1299-1315.
- Cutright, P. (1965). Political structure,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ocial security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37-550.
- Dogan, M., & Pelassy, D. (1990). *How to compare nations* (2nd ed.). Chatham: Chatham House.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Hybrid or unique?: The Japanese welfare state between Europe and Americ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3), 179-189.
- Esping-Andersen, G., & Development,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 Estevez-Abe, M. (2008). *Welfare and capitalism in postwar Japan*. Cambridge Studies in Comparative Politic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ertz, G. (2006). *Social science concepts: A user's guid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Goodman, R., & Peng, I. (1996).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Peripatetic learning, adaptive change, and nation-building. In G. Esping-Andersen, & Development,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Eds.),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 Goodman, R., White, G., & Kwon, H. (1998).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tate*. London; New York: Routledge.
- Gough, I.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London: Macmillan.

- _____ (2001). Globalization and regional welfare regimes: The east asian case. *I*, 163-189.
- Gough, I., & Thomas, T. (2000). Why do levels of human welfare vary across nations? In I. Gough (Eds.), *Global capital, human needs and social policies: Selected essays, 1994-99* (pp. 105-130) New York and Houndmills, U.K.: Palgrave.
- Hall, P. A., & Soskice, D. (2001).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In P. A. Hall, & 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cker, J. (2004). Privatizing Risk without Privatizing the Welfare State: The Hidden Politics of Social Policy Retrench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243-260.
- Holliday, I. (2000).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48*, 706-723.
- Holzmann, R., & Jørgensen, S. (1999). Social protection as Social Risk Management: Conceptual Underpinning for the Social Protection Sector Strategy Paper.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9904. Washington, DC: World Bank.
- _____ (2000). Social Risk Management: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and Beyond.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0006. Washington, DC: World Bank.
- Hort, S. E., & Kuhnle, S. (2000). The coming of east and south east asia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0*(2), 162-184.
- Johnson, C. A.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nes, C. (1993). The pacific challenge: Confucian welfare states. In C. Jones (Eds.), *New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pp. 198-217). London: Routledge.
- Kim, P. H. (2010).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debate and surrogate social policy: An exploratory study on Japan and South Korea. *Socio-Economic Review*, *8*(3), 411-435.
- Kwon, H. J. (Eds.). (2005).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in east asia*. Basingstoke: UNRISD/Palgrave.
- Kwon, H. J. & Yi, I. (2009).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Korea: Governing multifunctional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Change*. *40*(4), 769-792
- Lee, S. SY. (2011a). The evolution of welfare production regime in 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Japan and Taiwan.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6*(1), 49-75.
- _____ (2011b). A Critique of Fuzzy-set Method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Quality and Quantity. 2011. DOI: 10.1007/s11135-011-9633-8.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2*, 159-173.
- Mahoney, J., & Rueschemeyer, D. (2003).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chievements and agenda. In J. Mahoney, & D.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 Cambridge Univ Press.
- Mayer, L.C. (1989). *Redefining Comparative Politics*, Newbury Park, CA: Sage.
- OECD. (1981). *The welfare state in crisis*. Paris: OECD.
- Offe, C., & Keane, J.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Mass.: MIT Press.
- Orloff, A. (1996). Gender in the welfare 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51-78.
- Rieger, E., & Leibfried, S. (2003). *Limits to globalization: Welfare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Oxford, UK; Malden, MA: Pol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Blackwell Pub.
- Ragin,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tori, G. (2009). Guidelines of concept analysis. In D. Collier, & J. Gerring (Eds.), *Concepts and methods in social science*. London: Routledge.
- Seeleib-Kaiser, M. (2002). Globalisation, political discourse, and welfare system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Germany, Japan, and the USA. *Czech Sociological Review*, 38(6), 749-769.
- Tang, K. L. (2000).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 east asia*. New York: Palgrave.
- White, G., & Goodman, R. (1998). Welfare Orientalism and the search for an East Asian welfare model. In Goodman, R., G. White, G., and Kwon, H. J., (Eds.),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London: Routledge.
- Wilensky, H. L.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oncept Structures, Functional Equivalence and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Discussion: An Application of Set-Theo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Lee, Sophia Seung-yo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welfare regimes by Esping-Andersen, discussion on 'other' types of welfare regimes was facilitated and the scholarly focus o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gradually shifted to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discussion from the late 1990s. Literature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creased our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ot only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as a whole but also of each country in the region. However, compared the attention given to developing variables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Recognizing the limitation in developing comparable variables without a concept analysis of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ceptualization and concept analysis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ies. This paper first discusses on the concepts, conceptualization and on the use of set theo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Next, the study argues the validity of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and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this paper suggests how the concept of functional equivalence can be successfully employed for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 Ph.D.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sophia.sy.lee@ewha.ac.kr)

studies with a concept analysis and by applying a set theory including the fuzzy set theory.

Key Words: East Asian welfare states, set theory, functional equivalenc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concept structure, family resemblance concept structure, fuzzy-set theory.

◆ 2012.08.16. 접수 / 2012.09.13. 1차 수정 / 2012.09.21. 게재 확정